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 안건조세정보



#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5명 + 세무직원 286명 = 성실한 401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0년 매출액 535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금융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 박윤종(대표이사)·김형석·고주현·이동건·안수현·장용석 등 70명 등기이사파트너 / 심리실: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심리역)		
	고두환·고영일·공희성·김경수·김봉수·김수범·김영근·김옥철·김윤전·김종창·김준영·김준일·김형석·나경수·박규태·박기훈·박병준·배익권·송형근·안수환·윤훈기·이만선·이미지·이샤야·이승환·이원재·이형주·정상문·조민기·조성민·조영우·진경일·진수미·표정형·최우영·한상표·한용주·홍종혁·허진영(변호사: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곽영미·김태현·이현섭·배문호·송태현·최민욱·신민석·조세용·황준호·정호신·김동현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김용환·김수범·홍희빈·이혜리·강윙희·김현단·선지우·박경혜·이원구	
동작남부본실	02-6011-5514	이남재·정현·허근·황창연·장욱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장원택·김현민 + 3인
부산강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이동계·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김태경·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김형진·정대환 + 10인	논현지점 571-3700 정원웅·임진호·안영호 + 4인
광주호남본부	062-714-3303	양철성·김희표·김민주·김창훈·최재용	삼성동지점 02-312-2254 안수현·조성민·유진우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이성태·양승민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고주현·양용석·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홍영표·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유지윤·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고경호·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원영민·강병훈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이희곤·정영훈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이동건·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송주호·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이준상·이승호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윤경만·박희원·이우목·이미경 경영지도사		

## 안사회계법인의 상장·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창업적 활동함.(02-829-7575)

- ESG컨설팅·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 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 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외국·해외비즈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과 자원개발 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사외이사취임,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 6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금)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 거래세 신고납부
20(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30(목)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1기분 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 신고 납부, 일용·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이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아파트 ·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 기능 여부 ..... 2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계산방법 ..... 4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 운반구 · 유형자산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5

## 이달의 특집

- 2022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 8
-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국세청) 80

## 경영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 110
- 인재육성 모범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118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 1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 127

## 회계정보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금융감독원) ..... 132

## 노동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 137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5월) ..... 144

#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 핵심 point ..... 안세재경저널 박윤종(대표이사)

### ◎ 아파트 ·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안세재경저널 2022/5/11일자 통권 1570호(표지)

개념구분	사업자등록 가능성과 범위(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에 제한 규정 없음)
일반 사무실	당연 가능(업종제한 없음) - 위험물 등은 별도법 적용
근린생활시설	당연 가능(업종제한 없음) - 위험물 등은 별도법 적용
사무용 오피스텔	당연 가능(주변 이웃의 민원이 없는 업종이면 됨)
단독주택(주거용)	가능함(주택 중 일부 여유공간을 개인 단독 사무실로 쓰는 개념)
주거용 오피스텔	제한규정 없어 가능(단, 이웃 주민의 민원이 없어야 함)
공동주택	주거 전용이 원칙이나 제한규정 없음(업종에 따라 이웃의 민원제기 없으면 개인 자유업종은 가능)
아파트 (대단위 공동주택)	주거 전용이 원칙(단일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 집주인 허락 필요 - 이웃집의 민원이 없으면 개인 자유업종 가능)
LH 임대아파트	주거 전용이 원칙(임대주인 LH가 불이익 등 문제제기하지 않는 현실임)

● **매출의 총액주의와 순액주의 처리는 많은 위탁가공업종의 회계쟁점임**  
 - *안세재경저널 2022/5/11일자 통권 1570호(긴급시사해설)*

개념, 구분	거래자(본인)의 총액주의	거래자(대리인)의 순액주의
근거규정 (국제회계기준 K-IFRS 1115호)	재화의 통제권 확보시 전액 매입 · 매출반영	재화의 주선, 부분 임가공공급시, 위탁 수수료만 매출 반영
거래방법	중간상, 대리인, 임가공자가 원재료를 책임매입하고 가공 후 총액매출함	중간대리인이 임가공행위만 하고 매입 · 매출은 최종 당사자 처리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화구입 (차) 원재료 97 (대) 매입채무 97</li> <li>●재화판매 (차) 매출채권 100 (대) 매출 100</li> <li>●결제완료 (차) 현금예금 3 (대) 매출채권 100 매입채무 97(또는 총액 현금수수)</li> </ul>	재화구입과 판매의 차액만 매출반영 (차) 현금예금 3 (대) 임가공수익 3 (재화구입과 판매는 당사자 간에 97로 직접거래)
판단기준 (재화의 실질통제여부)	실질적 통제권 있음의 판단근거 ① 거래의 성립에 대한 주된 책임부담 ② 매입 · 매출재화의 재고보유 위험부담 ③ 재화의 구입가격 · 판매가격의 재량권 보유	통제권 없음의 예시 ① 원재료 생산자(다른 당사자)와 수요자의 거래 ② 생산자와 최종 수요자 간 연간재고생산 · 소비계획 ③ 쌍방간의 공급물량에 따른 가격결정의 결과의 수용, 차액정산
실제 업계현실	철강 · 소재 회사에서 구입해 임가공 후 자동차회사 납품 식품수입 · 소분업체의 자기매출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권 판매수수료 등, 단체 여행수수료</li> <li>●항공화물의 단순중개, 집하(forwarding) 수수료</li> </ul>
기업의 입장	매출 · 수입금액 총액선호 · 경쟁업종(총액으로 공급물량 배정, 코스닥 상장기업 등의 매출유지조건)	보수주의적 소유경영자 (최종 기여 순이익은 같으므로 과대매출반영을 기피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2/5/18일자 통권 1571호(표지)

개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정의 범위	모든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아닌 개인사업자		직전 1년간 공급가(매출액)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2021년부터 변경)
과세기간	1기(1. 1 ~ 6. 30)	2기(7. 1 ~ 12. 31)	1년에 한번 통합신고(1. 1 ~ 12. 31)
신고시점	7월 25일	1월 25일	매년 1회 1월 25일
세금계산서	모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매출 4800만원 미만자는 발행불가</li> <li>• 직전매출 4800만원 이상 - 8천만원까지는 발행가능</li> </ul>
납부세금	$\text{매출액} \times 10\% - \text{실제 매입액} \times 10\%$		$\text{매출액} \times \text{업종별 부가이득율} \times 10\%$ (부가율 : 전기가스수도 5%, 소매·음식점 15%, 제조·농·임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 기타서비스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40%)
예정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 3개월 단위 예정고지</li> <li>• 법인 중에서도 전 6개월 매출 1.5억 미만시 3개월 단위 예정고지</li> </ul>		전년도 세액의 50%를 상반기 6개월에 종료 후 7월 25일에 6개월 단위 고지납부

◎ 복수소득자의 무기장, 불성실회계장부의 가산세는 사업소득에만 적용함

- 안세재경저널 2022/5/18일자 통권 1571호(긴급시사해설)

1. 복수소득자 : 개인의 경제활동이 다원화, 디지털화 되고, 온라인 경제활동으로

추가소득도 창출하여, 일반적 근로소득 외에도 소규모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의 여러가지 소득 발생됨.

2. 사업소득 : 사업자는 회계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실제 소득으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중소규모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소득가산배율 2.8배나 3.4배)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할 수 있도록 하되, 가산세가 적용됨.
3. 각종소득 :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이전 총액소득임, 근로소득은 회사(지급자)의 연말정산 소득에 의함. 기타소득은 법정필요경비(60%, 75%, 또는 80%)가 자동 적용됨.
4. 가산세 없음 : 실제기장의 사업소득+각종 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없음.
5. 가산세 계산 : 사업소득을 실제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사업소득 해당액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됨(소득세법 제81조의5)

$$\text{가산세} = \frac{\text{종합소득}}{\text{최종 산출세액}} \times \frac{\text{추계종합소득(실제기장이 아닌 경우)}}{\text{추계종합소득} + \text{근로소득} + \text{금융소득 총액} + \text{기타소득}} \times 20\%$$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 운반구 · 유형자산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안세재경저널 2022/5/25일자 통권 1572호(표지)

개념, 구분	소득세법 조문, 해당사항 상세내용, 제외조건 등	비용
사업소득범위	19조 : 한국산업분류표상 열거·계시된 모든 계속·반복적 영리 활동(농·어·광, 제조,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실제비용
기타소득 제외	20조 : 사업소득에 속하지 않는 일시·우발적 열거소득, 산업재산권 양도 등	법정경비 60% 인정
차량운반구	19조 20호 :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등 매각대금도 사업수입에 포함	유지비,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양도소득 제외	19조20호 : 사업용자산이라 하여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 건물 양도소득은 제외 → 양도소득세로 별도과세함	양도가 - 취득가
총수입산입	24조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재난영업손실 보상금도 포함), + 간주임대료	사업원가
총수입 불산입	26조 : 세금환급, 무상수증익과 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보전 총당금액	해당없음
복식부기 기준	160조 : 장부비치·기록의무나 일정 매출액 이상의 성실신고의무 판단 기준 매출액(수입금액)에서 사업용유형자산(차량·운반구,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각액) 수입금액은 제외함	해당없음

● 사전증여·상속재산의 합산과세·별도과세와 대응 공제금액 배분  
- 안세재경저널 2022/5/25일자 통권 1572호(긴급시사해설)

개념, 관계		사전증여 : 수증자별로 계산		사후 상속(상속재산 전체합산)	
		본인(서로 합산)	배우자	본인(자녀)	배우자 (본인과 별산)
본인		해당안됨	10년 단위 6억 공제	해당안됨	일괄공제 5~30억원 한도 (상속비율배분 금액 공제 가능)
배우자		10년 단위 6억 공제	해당안됨	일괄공제 5~30억원 한도 (상속비율배분금액 공제 가능)	해당안됨
자녀	1	10년 단위 5천만원	증여 겹치면 0	일괄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2	증여 겹치면 0	10년 단위 5천만원		
	3	공동증여시 2500만원(반)	공동증여시 2500만원(반)		
	4(미성년)	공동증여시 1000만원(반)	공동증여시 1000만원(반)		
부모(존속)		10년 단위 5천만원	겹치면 0원	×	×
손자	성인	10년 단위 5천만원	증여 겹치면 0원	상기의 일괄공제 5억원에 포함됨	상기의 일괄공제 5억원에 포함됨
	미성년	10년 단위 2천만원	증여 겹치면 0원		
유리·불리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부부의 자녀 증여재산은 10년 내 모두 합산 계산(상증법 제47조제2항)되며, 공제금액은 배분계산됨(부부재산 분산되어도 증여세에 유리한 점은 없음), 따라서 10년 단위로 다른 기간에 증여함이 유리</li><li>조부모·외조부모는 합산 안함</li></ul>		부부가 각자 균등하게 상속재산이 분산소유 관리된 경우, 상속세가 가장 적음	



이달의

특 집

## 2022 개정세법 해설

— 국세청 —

###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신설
-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
-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추가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 2021.12.0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20호) : 2022.2.15. 공포

## 0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소득세법 제21조 등)

## 가. 개정취지

-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input type="radio"/>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input type="radio"/> (소득구분) 기타소득 <input type="radio"/>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input type="radio"/>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input type="radio"/>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 (의제 취득가액) ' 22.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b>❶</b>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해당 사업자가 ' 22.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b>❷</b> 그 외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 22.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input type="radio"/> ' 22.1.1. 이후 → ' 23.1.1. 이후 - ' 22.1.1. → ' 23.1.1.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top: 10px;">             ' 22.1.1. 0시              → ' 23.1.1. 0시           </div>

## 02.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25조)

##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input type="radio"/>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1.12.31.	<input type="checkbox"/>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input type="radio"/> ' 23.12.31.

0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input type="radio"/>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추 가> <input type="radio"/>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좌 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input type="radio"/> (공제율) 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input type="checkbox"/>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input type="radio"/>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 규정 <input type="radio"/>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0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신설)

## 가. 개정취지

-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1년간( ' 21.1.1.~' 21.12.31.) 5%p 한시 상향		
구 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 21년	'22년~
1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05.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법 제81조의2, 법인세법 제75조)

##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산정 합리화

<p>○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p> <p>* (개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법인) ① 개인사업자에서 3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또는</p> <p>②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p> <p>○ (요건) 제출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p> <p>* (개인) 다음연도 6월 30일 (법인)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p> <p>○ (계산식)</p> <p>① 산출세액* × 5%</p> <p>* (개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좌 동)</p> <p>○ (계산식) max [① ②]</p> <p>① (좌 동)</p> <p>② 수입금액* × 0.02%</p> <p>*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p>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개인)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0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p> <p>○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p> <p>○ (가산세) 미발급금액 × 20%</p> <p>-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p>	<p>□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p> <p>(좌 동)</p> <p>-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0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의14, 법인세법 제74조의2 신설)

### 가. 개정취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input type="checkbox"/>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①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times$ 1% ②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times$ 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08.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소득세법 제86조)

###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좌 동)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09.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소득세법 제150조)

###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input type="radio"/>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input type="radio"/>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input type="radio"/>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3em; margin-right: 10px;">}</div> <div>             (좌 동)           </div> </div> <input type="radio"/>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 (적용기한) ' 24.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0.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

### 가. 개정취지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22.7.1. ~ ' 24.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 <input type="checkbox"/> (제출주기) 매년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input type="checkbox"/> (제출주기) 매월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소득금액분부터 적용

### 12.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세법 제173조 제2항, 제17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 가. 개정취지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  <div>&lt;신 설&gt;</div>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input type="radio"/>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세자료 건별 20만원 <input type="radio"/>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과세자료 건별 10만원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소득금액분부터 적용

## 1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가. 개정취지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div>&lt;추 가&gt;</div> <input type="radio"/> (한도) 월 20만원 이내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input type="radio"/>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14.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소득(3%~5%)으로 과세 <input type="checkbox"/> 천재지변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input type="checkbox"/>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사회재난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input type="checkbox"/>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1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계좌 <input type="checkbox"/>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li> <li>○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lt;추 가&gt;</li> </ul>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li> <l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2022년 4월 시행)</li> </ul>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4. 이후부터 적용

### 1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li> <li>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lt;추 가&gt;</li> <li>[이전 과세기간 납입분]</li> <li>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li> <li>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li> <li>④ 이연퇴직소득</li> <li>⑤ 운용수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li> <li>① (좌 동)</li> <li>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li> <li>* ISA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li> <li>(좌 동)</li> </ul>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 17.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가. 개정취지

- 납세부담 완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input type="radio"/>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input type="radio"/>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대손금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 5px 0;"></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input type="radio"/>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 18.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input type="radio"/>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input type="radio"/> (대상차량)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input type="radio"/>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장 적용범위 명확화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 5px 0;"></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p> <input type="radio"/> (좌 동)

## 19.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 지정요건 <b>①</b>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b>②</b>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 초과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제외 <b>③</b>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b>④</b> 1년 이상 단체 명의로 통장으로 회비·후원금 등의 수입 관리 <b>⑤</b>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4.30일까지 공개 <b>⑥</b>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input type="checkbox"/>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산정방법 변경 등 <b>①</b> (좌 동) <b>②</b> (좌 동)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제외 (좌 동) <b>⑥</b>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의 투명성 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이행규정 보완 <input type="checkbox"/>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

<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 지정 취소요건* * 국세청장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 시 기재부장관에게 취소 요청 ❶ 1천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❷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 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❹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❺ 단체가 해산한 경우 ❻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지정 취소요건 강화 (좌 동) ❼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21.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 가>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 *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을 관리하는 고유식별번호 - (좌 동)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 평균법 적용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input type="checkbox"/>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 <추 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2. 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83조 제7항 신설, 제20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신설, 제137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교환·입고·인출*시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식 명확화 * 입고·인출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기축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가액 산정 * 교환거래 체결시점에 코인마켓 사업자가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5항, 제216조의3, 별표4)

가. 개정취지

-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p>*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 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p> <p>○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p> <p>○ (제출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li> <l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li> <li>- 교육비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자료집중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은행연합회·보험협회 등</li> <l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 협회</li> <li>- (교육비 등) 교육부·보건복지부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좌 동)</p> <p>○ 제출항목 확대</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증명서류</li> </ul> <p>○ 자료집중기관 확대</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li> </ul>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24.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input type="checkbox"/>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1개월 → 3개월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 가. 개정취지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input type="checkbox"/>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26.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방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금액 추계시 상한 적용 <input type="checkbox"/> (상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right: 5px;"></div> <div>(좌 동)</div> </div> <input type="checkbox"/> 2024.12.31.



## 27.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 가. 개정취지

-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input type="radio"/> (대상)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input type="radio"/>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명확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28.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제31442호) 부칙 제19조 제2항)

##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input type="radio"/> 2021.12.31. 까지	<input type="checkbox"/> 과세유예 기간 연장 <input type="radio"/> 2023.12.31. 까지

## 2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별표3의3)

###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p> <p>*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p> <p>①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p> <p>②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p> <p>③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p> <p>④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p> <p>⑤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p> <p>⑥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p> <p>* ①~⑤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p> <p>※ 전체 95개 업종</p>	<p><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대상 확대(17개 업종 추가)</p> <p>〔좌 동〕</p> <p>○ 행정사 추가</p> <p>○ 숙박공유업 추가</p> <p>○ 13개 업종 추가</p> <p>* ①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p> <p>②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p> <p>③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p> <p>④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p> <p>⑤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p> <p>⑥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p> <p>⑦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p> <p>⑧ 가전제품 수리업</p> <p>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p> <p>⑩ 여자용 겹옷 제조업</p> <p>⑪ 남자용 겹옷 제조업</p> <p>⑫ 구두류 제조업</p> <p>⑬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p> <p>○ 2개 업종 추가</p> <p>* ①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p> <p>② 기타 통신 판매업</p> <p>※ 전체 112개 업종</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input type="radio"/>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input type="radio"/>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2억원 → 1억원 이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1.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input type="radio"/> 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 소포배달, 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적용 대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78호) : 2021.1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659호) : 2021.5.4.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0호) : 2022.2.15. 공포

### 0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input type="radio"/> 실지거래가액 9억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input type="radio"/> 실지거래가액 12억원
<input type="checkbox"/> 고가주택 양도차익 <input type="radio"/>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방영 <input type="radio"/> 9억원 초과분 → 12억원 초과분*
$* \text{양도차익} \times \frac{(\text{양도가액} - 9\text{억원})}{\text{양도가액}}$	$* \text{양도차익} \times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원})}{\text{양도가액}}$

<input type="checkbox"/>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input type="radio"/>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frac{(\text{양도가액} - 9\text{억원})}{\text{양도가액}}$	<input type="radio"/> 9억원 초과분 → 12억원 초과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원})}{\text{양도가액}}$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02.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 원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input type="radio"/>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input type="radio"/>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요건 정비 <input type="radio"/>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input type="radio"/> (좌 동) *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202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함

### 03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제166조, 제167조의3)

#### 가. 개정취지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및 정비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정비사업의 유형 <input type="checkbox"/>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관련 규정	적용 시기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소득법 § 88)	20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 사업 범위 확대(소득법 § 89②)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 § 155⑧)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 156의2④,⑤)	
상속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 156의2⑦)	20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혼인 및 동거분양 합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 156의2⑧,⑨)	
상속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 156의3⑤)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산정(소득령 § 166①,②,⑦)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소득령 § 155②,③)	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등록임대사업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 155②)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 167의3⑤)	



## 04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정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민간건설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공공건설임대주택 <추 가>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공공매입임대주택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05.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종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55조 제20항·제21항·제22항·제24항, 제167조의3 제1항·제4항·제7항)

## 가. 개정취지

- 보육지원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영유아보육법(§13①)에 따른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 대상 :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으로 확대 *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어린이집 등도 포함
○ 특례 - 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 가정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06.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 가. 개정취지

- 전월세시장 안정화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신설</p> <p>○ (특례 대상)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p> <p>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p> <p>* ①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p> <p>②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p> <p>②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p> <p>③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p> <p>○ (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실거주 1년 인정(최대 1년 한도)</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2.20.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85

## 07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b>①</b>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 취득 <b>②</b>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요건 보완 <b>①</b> (좌 동) <b>②</b> (좌 동)  ㉠~㉡ (좌 동)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08.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❶, 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p> <p>❶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p> <p>－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p> <p>❷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p> <p>㉡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p> <p style="text-align: right;">〈추 가〉</p>	<p>□ 비과세 요건 보완</p> <p>❶ (좌 동)</p> <p>❷ (좌 동)</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20px;"> <p>㉠~㉡ (좌 동)</p> </div> <p>㉢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09.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 가. 개정취지

-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토지*의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또는 수용되는 토지 <input type="radio"/>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 <input type="radio"/>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요건 강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2년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5.4. 이후 사업인정 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

**10.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가. 개정취지**

-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말·체험영농 농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21.5.4.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주요 개정 내용**

- 국외투자지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소득신고 간소화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78호) : 2021.12.0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0호) : 2022.2.15. 공포

## 01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소득세법 제1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 가. 개정취지

-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간주 특례</p> <p>○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p> <p>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p> <p>㉡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p> <p>②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p> <p>③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p> <p>－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p>	<p>□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p> <p>○ (좌 동)</p> <p>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p> <p>㉡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p> <p>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p> <p>㉠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p> <p>㉡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p> <p>③ (좌 동)</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0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료제출 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 계산서 등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input type="checkbox"/> 자료 제출 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2022.2.15.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03.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소득신고 간소화

(소득세법 제1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 제2항)

## 가. 개정취지

-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소득신고 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input type="checkbox"/> ❶ 또는 ❷를 충족하는 경우 구성원별로(개인 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 각각 적용) 신고 ❶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 우 ❷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 우	<input type="checkbox"/>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좌 동)           </div>

<신 설>	<p>○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단체 구성원 1인이 일괄하여 소득신고가능(비거주자 한정*)</p> <p>* 거주자, 법인인 구성원은 종전대로 직접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p> <p>① 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국 납세자 번호 등 과세정보를 제출한 경우</p> <p>② 거주자인 해당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신고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동의한 경우 - 다른 구성원 일부만 동의한 경우 그 동의한 구성원에 한해 일괄신고 가능</p>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04.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제1항)

#### 가. 개정취지

- 사용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판단 용이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p> <p>○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p> <p>①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p> <p>② (기업 규모) 대기업*</p> <p>*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p> <p>③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p>	<p>□ 원천징수 요건 개선</p> <p>①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기준 구체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p> <p>㉠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p> <p>㉡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p> <p>(좌 동)</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 01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법인세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 가. 개정취지

-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도입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②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이상 보유 요건 배제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필요 <신 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 지속 요건 배제

\*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02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세법 제50조의2 신설, 같은 법 제113조)

#### 가. 개정취지

-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input type="radio"/>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03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법인세법 제60조의2)

## 가. 개정취지

-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input type="radio"/>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div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div>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법인 범위 보완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0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

## 가.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input type="radio"/>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5년간 보관할 필요 <input type="radio"/>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05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2)

## 가. 개정취지

-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input type="radio"/>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농업, 연구개발업 등 - 상호주의*에 의해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 검사용역이 비과세되는 국가의 비영리 외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좌 동) - 선급검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44조의2 제3항, 제111조 제1항 제17호)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input type="radio"/>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4호에 의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 제도 <input type="radi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input type="radi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 <input type="radio"/> 「한국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 금융기관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input type="radi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8038호 시행일)부터 시행

## 0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input type="checkbox"/>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추 가>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08.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 ①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4항·제15항)

##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input type="checkbox"/>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18.2.13.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li> <li>② 2018.2.13.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li> </ul>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보완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좌 동)</div>

<p>○ (지정방식 · 인정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 기부금단체*로 인정**</li> <li>* 2021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칭 변경(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li> <li>**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경과조치, 2018.2.13.)</li> <li>- 20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 ·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li> <li>- 2021.12.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 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li> <li>*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li> </ul>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❶, ❷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0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li> <li>* (신청기한) 2022.2.3.</li> <li>** 신규(2021~2023년), 재지정(2021~2026년)</li> </ul>
--	---

## 08.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 ②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사후관리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등 지정요건</p> <p>○ 공익적 성격이 있을 것</p> <p>○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p> <p>○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p>	<p><input type="checkbox"/>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p> <p>(좌 동)</p> <p>○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p>

## 08.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 ③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파목)

##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10% 한도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9.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해당 기준 조정 시 ❶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❷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❸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 가. 개정취지

-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b>❶</b>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b>❷</b>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b>❸</b>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input type="checkbox"/> 대상 법인 범위 확대 <b>❶</b> (좌 동) <b>❷</b>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 70% → 50% <b>❸</b>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3호·5호)

가. 개정취지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방식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input type="checkbox"/>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input type="checkbox"/>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계산

11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가. 개정취지

-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input type="checkbox"/>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요건 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년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5.4. 이후 사업인정 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

## 1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input type="checkbox"/>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13.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 가. 개정취지

- (양도대상 법인 확대) 연결납세 제도 보완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멸실과 실질이 유사한 소각도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 손익의 환입 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 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다른 연결법인에게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과세 이연 허용 및 환입 사유 명확화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 (좌 동)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발생·멸실	○ (좌 동)
○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 (좌 동)
<추 가>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90호) : 2021.12.2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8호) : 2022.2.15. 공포

### 01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19조의2 제1항)

#### 가. 개정취지

-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간주 특례 <input type="checkbox"/>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	<input type="checkbox"/>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p>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p> <p>❶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p> <p>㉡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p> <p>❷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p> <p>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p> <p>-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p>	<p>❶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p> <p>㉡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p> <p>❷ ❶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p> <p>㉠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 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p> <p>㉡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p> <p>❸ (좌 동)</p>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02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제4항)

####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자료제출 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p> <p>*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p> <p>○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 계산서 등</p> <p>○ (제출기한)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p>	<p>□ 자료 제출 기한 연장</p> <p>○ (좌 동)</p> <p>○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2022.2.15.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0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법인세법 제9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

#### 가. 개정취지

-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li> <li>○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li> <li>○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li> <li><input type="checkbox"/>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li> <li>○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li> <li><input type="checkbox"/> 현황자료 범위</li> <li>○ (작성 기준일) 매년 12.31일</li> <li>○ (제출내역)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락사무소 기본 현황, 임차 현황, 직원 현황, 운영자금 현황</li> <li>- 외국법인 본사 현황, 국내 거래현황, 국내 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li> <li>- 기타 연락사무소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li> </ul> </li> </ul>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90호) : 2021.12.2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8호) : 2022.2.15. 공포

#### 주요 개정 내용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
-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법 추가
-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
-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 소득대비 과다이자율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순서 명확화
-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88호) : 2021.12.21.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3호) : 2022.2.15. 공포

## 01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 개정취지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한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input type="checkbox"/>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기준으로 조정하여 다음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경정청구 가능 - 과세표준 확정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기준에 의한 과세 조정가능기한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좌 동) - 기한 후 신고기한

## 02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 가. 개정취지

-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금융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p> <p>❶ 국조법 제8조 제1호부터 5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p> <p>*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방법</p> <p>❷ ❶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p> <p>－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정상가격 산출시 활용가능 방법 추가</p> <p>❶ (좌 동)</p> <p>❷ ❶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p> <p>－ (좌 동)</p> <p>－ 기초금융자산에 연계된 신용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스왑계약의 가산율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p> <p>－ 무위험 이자율에 부도위험, 유동성, 만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산율을 더하여 계산한 이자율(경제적 모델 활용)</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03.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가. 개정취지

- 다국적기업그룹 내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 <input type="checkbox"/> (자금통합거래 정의)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관계회사*들의 개별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경우 *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국외특수관계자 <b>①</b> 그룹 내 통합계좌를 보유 : 참여하는 관계회사가 해당 통합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체 받는 방법 <b>②</b> 통합계좌 없이 관리 : 관계회사 계좌 전체잔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청구하는 방법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방법) <b>①</b> → <b>②</b> 순서로 산출 <b>①</b> (자금통합대표자*에 대한 보상) 수행 기능, 부담 위험, 사용 자산 등을 고려하여 용역 거래 또는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방법 적용 * 자금통합거래를 담당하는 관계회사 등 <b>②</b>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보상) 통합계좌 참여시 정상이자율 - 통합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통합참여자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감소하는 이자비용 등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산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04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및 경정 * 제3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부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는 부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	<input type="checkbox"/>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결정·경정의 예외를 인정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원가 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과 차이가 날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기준으로 결정·경정 가능  <신 설>	○ (좌 동)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정상원가 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경정 가능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05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6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가격 심의 절차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기능) 국제·관세 과세가격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 심의 * 국제·관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국세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기획재정부에 조정 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구성) 15명 이내 민·관위원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폐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text-align: center;">(좌 동)</div>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을 위한 협의체 <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부터 적용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위원회 존속기한이 '21.6.30.까지인 점 감안

**07.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차입금 배분기준 보완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p> <p>*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p> <p>○ (업종별 배수) 금융업 : 6배, 비금융업 : 2배</p> <p>－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 ① 또는 ②)</p> <p>－ ①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 - (좌 동)</p> <p>－ ②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p> <p>*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p>	<p>□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 명확화</p> <p>○ (좌 동)</p> <p>－ (좌 동)</p> <p>－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8 소득대비 과다이자율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4항·제5항)

## 가. 개정취지

-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방법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input type="radio"/> $\text{조정소득금액} = \text{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감가상각비} + \text{순이자비용}$ $\langle \text{단서 신설} \rangle$ <input type="radio"/> 손금불산입 순서	<input type="checkbox"/>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손금불산입 규정 명확화 <input type="radio"/> (좌 동) - 단,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 으로 간주 <input type="radio"/>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 우선</li> <li>-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li> </ul>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가. 개정취지

- 역외 조세회피 방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세부담률 판정기준 <input type="radio"/>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input type="checkbox"/>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input type="radio"/> 15% 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0.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특정외국법인 범위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가. 개정취지

- 역외 조세회피 방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input type="radio"/>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한해 적용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등	<input type="checkbox"/>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input type="radio"/> 법인과세 신탁*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1.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5항)

###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외재산 증여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input type="radio"/> (원칙)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input type="radio"/> (예외)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제출기한을 2개월 → 3개월로 연장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당시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부터 적용

## 12.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가. 개정취지

- 조세 정보교환의 실효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 소유자 정보의 범위</p> <p>❶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조합 등)인 경우 : 특금법*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p> <p>*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p> <p>※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p> <p>①→②→③ 순서로 진행</p> <p>①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 지분 25% 이상 소유자</p> <p>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li> <li>-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등</li> <li>-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li> </ul> <p>③ 해당 법인·단체 대표자     &lt;추 가&gt;</p>	<p>□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 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p> <p>❶ (좌 동)</p> <p>❷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 등 단체의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단체 대표자·임원 또는 해당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li> </ul>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 13.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 가. 개정취지

- 거주자증명서 발급사유의 법적 근거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증명서 발급 요건 <input type="radi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추 가> <추 가> ※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서식) 상 발급 목적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그 밖의 조세조약의 적용 -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목적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추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 이외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그 밖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부터 적용

### 14.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input type="radio"/>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input type="radio"/>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임대)·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구 분	제출내용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추 가>		보유시	보유내역
○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보유내역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구 분	과태료	구 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추 가>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 과태료 한도 : 1억원		※ 과태료 한도 : 1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의무) 20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20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15.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자료 조기 제출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 (좌 동) ○ (좌 동)				
<table><tr><td>대상자료</td><td>과태료</td></tr><tr><td>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td><td>보고서별 3,000만원</td></tr></table>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

<신 설>

※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 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 기한 후 제출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요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 관련 조문 명확화</li> <li>○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li> <li>○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li> <li>○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li> <li>○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li> <li>○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li> <li>○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li> <li>○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li> </ul>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
-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
- 증권제와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91호) : 2021.12.21.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4호) : 2022.2.15. 공포

## 0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 관련 조문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47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input type="radio"/>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추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증여재산 <input type="radio"/> 전환사채 전환 이익·주식 상장이익·합병 상장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증여재산 추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0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상속 시 해당 가업상속재산 가액 공제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input type="radio"/> 중견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03.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가. 개정취지

-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가액 공제 <input type="radio"/> 15억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확대 <input type="radio"/> 20억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04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가. 개정취지

- 경영승계 준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 인정요건 <input type="radio"/>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업종 열거	<input type="checkbox"/> 가업의 업종 유지의무 완화 <input type="radio"/> 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 (예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05.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 가. 개정취지

- 유치원 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input type="radio"/>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input type="radio"/> 교육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 직원 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input type="checkbox"/>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851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06.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가. 개정취지

-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 피담보채무] 공제(6억원 한도) ①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③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④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공제 적용대상 확대  (좌 동)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07.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 가. 개정취지

-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li> </ul> </li> <li>○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li> </ul>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2023.1.1.부터 적용)

### 08.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2)

#### 가. 개정취지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증여일</li> <li>○ 법인이 배당을 한 날</li> <li><input type="checkbox"/>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li> </ul> </li> <li>○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5.31일</li> </ul> <p>※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일까지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증여일 명확화</li> <li>○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li> <li><input type="checkbox"/> 신고기한 명확화</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일까지</li> </ul> </li> </ul> <p>※ 시행령에서는 삭제</p>

## 09.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 가. 개정취지

- 특정법인 거래 관련 증여세 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시 증여세 한도* * (法)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 법인세 상당액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계산방식 - [증여재산가액 -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로 계산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input type="checkbox"/> 계산방식 변경 -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증여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0.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가. 개정취지

-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식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Max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rgin-left: 10px;">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 margin-right: 5px;"> <b>①</b> ① 재취득가액              → ② 순장부가액              → ③ 시가표준액           </div> <div> <b>②</b> 임대환산가액           </div> </div> </div>	<input type="checkbox"/> 임대환산가액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p>－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p> $\text{임대보증금} + \frac{\text{1년간 임대료 수입}}{\text{이자율}}$	<p>－ 자산별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세분화</p> <p>① 입목 및 그 외 유형자산 :</p> $\text{임대보증금} + \frac{\text{1년간 임대료 수입}}{\text{이자율}}$ <p>②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p> $\text{임대보증금} + \sum \frac{\text{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1 + \text{이자율})^n}$ <p>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 세법령 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기간 이자율 : 3%</p>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1.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 가. 개정취지

- 국외주식에 대한 평가제도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외자산 평가 <input type="radio"/>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 <input type="radio"/>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한 경우 ①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② 2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input type="checkbox"/> 감정기관 범위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감정기관에 회계법인 등 포함 ① (좌 동) ② 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추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2.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부연납 허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 5년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b>①</b> 가업상속재산 - 비중 50% 미만 :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 비중 50% 이상 :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b>②</b> 일반 상속재산 : 5년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좌 동)</div> <b>②</b> 일반 상속재산 : 10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13.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 가. 개정취지

-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 허용 <input type="checkbox"/> 대상 -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체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 다만,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input type="checkbox"/> 한도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하여 물납 신청 허용 ※ 물납 신청,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14.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자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제공자료 및 제공자 <b>①</b> 가족관계 등록사항 : 법원행정처장 <b>②</b> 재산세 과세 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관련 조문 정비 <input type="checkbox"/> (좌 동) <b>②</b> 특별자치시장 추가

## 15.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증권계좌 간 거래 내역 관련 과세자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업자 자료 제출 의무 <input type="checkbox"/> 주식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이체 내역 제출 의무 부과  <input type="checkbox"/> 주식등의 계좌 이체 자료 제출 방식 <input type="checkbox"/> (제출 기한)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제출 내용) 제출자 및 이체자의 인적사항, 이체연월일, 이체대상주권등 종목명, 이체 수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 분야)

### 01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액 관련 예측가능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의무</p> <p><input type="radio"/> 의무 사용액</p> <p>    - 출연재산 가액의 1%</p> <p>    * 주식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 3%</p> <p><input type="radio"/>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p> <p>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p> <p>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p> <p>        &lt;단서 신설&gt;</p> <p><input type="radio"/> 위반시 제재</p> <p>    -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p>	<p><input type="checkbox"/>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p> <p><input type="radio"/> (좌 동)</p> <p><input type="radio"/>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p> <p>    - (좌 동)</p> <p>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평균</p> <p>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p> <p><input type="radio"/> (좌 동)</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2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의무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한(12월말 공익법인 기준) <input type="radio"/> 3.31.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li> <li>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li> <li>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li> </ul> <input type="radio"/> 4.3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결산서류 등 공시</li> <li>②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사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신고</li> </ul> <p>* 운용소득 80% 이상 및 출연재산 1% 이상 공익목적 사용, 이사구성 요건 충족, 특수관계인 등의 정당한 대가없는 재산 사용 및 광고·홍보 금지</p> <input type="radio"/> 6.3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기한 합리화 <input type="radio"/> 3.31. → 4.30. 이내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 5px 0;"></div> (좌 동)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180px; margin: 5px 0;"></div>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전에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로서 2022.2.15. 당 시 그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지정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요건 판단기준일)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input type="checkbox"/> (지정면제 대상) <input type="radio"/>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결과 회계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input type="radi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적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②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및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 및 별표 1·2)

## 가. 개정취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input type="radio"/> 전체 지정 대상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지정선임 2년)에 균등 지정되도록 배분 ※ '22년 5월, 약 24개 공익법인 지정(12월말 법인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개)  <input type="checkbox"/> 지정 방법 <input type="radio"/> 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 <input type="radio"/> 지정 순서: ① → ②순으로 지정 ①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 * 1) 직전 자유선임기간 감사계약 未종료, 2) 감리 진행 중인 경우

<p>②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p> <p>○ 감사인 지정점수 : <math>\frac{\text{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1 + 3n}</math></p> <p>* 경력기간별 감사인점수: 공인회계사별 경력에 대한 가중치 반영</p> <p>* n: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 수</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③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의 사전 신청 및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

#### 가. 개정취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 감사인 사전 신청</p> <p>○ 사전에 국세청에 신청*한 감사인에 한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p> <p>* 신청요건 : ①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익법인 감사 실무교육(공인회계사회)을 이수</p> <p>②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수행</p> <p>□ 감사인 지정 배제 사유 및 기간</p> <p>① 감사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공소가 제기된 자 → 조치* 확정 후 1년</p> <p>*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p> <p>②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 미체결 → 기한도과일로부터 1년</p> <p>③ 공익법인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 등에 회계기준 위반 통보 → 조치*확정 후 1년</p> <p>*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 :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경고, 주의</p> <p>④ 부당한 비용부담 등을 청구 → 조치* 확정 후 1년</p> <p>* 「공인회계사법」제4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 가. 개정취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 구체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 까지 공익법인·감사인에 지정 통지</p> <p>* 과세연도 시작 후 11개월 15일이 되는 날</p> <p>※ 매년 과세연도 시작 후 9개월 1일이 되는 날부터 약 10주간 감사인 지정 절차를 진행하며, 지정기준일까지 지정 통지</p> <p>※ 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지정 절차</p> <p>① (자료제출) 공익법인은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9.1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p> <p>②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에 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p> <p>* (고시 규정 사항) 공익법인·감사인의 의견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에 따라 다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p> <p>③ (지정통지) 지정기준일(11월 15일)까지 해당 공익법인 및 지정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통지</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⑤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7항)

## 가. 개정취지

- 지정 감사인 변경 요청 사유 구체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 (의견제출)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p> <p>○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가능</p> <p>① 직무제한*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등</p> <p>②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p> <p>③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p> <p>□ (재지정요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 요청 가능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용</p> <p>① 지정 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p> <p>②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법인이 출자한 공익법인인 경우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p> <p>③ 그 밖에 지정 감사인이 법령등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⑥ 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감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감리사유) 표본 분석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통보  <input type="checkbox"/> (대상 선정 및 점검)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①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② 감리 대상 선정안 ③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필요시 감사인·공익법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 요구 가능  <input type="checkbox"/>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반사항이 있는 감사인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을 금융위에 통보 ② 위반사항이 있는 공익법인등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은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통보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⑦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5항)

#### 가. 개정취지

- 감사인 지정 및 감리 관련 업무 효율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국세청장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 관련 업무 위탁 기관 : 공인회계사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0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관련 유인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input type="checkbox"/>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 $\text{Max}(\text{㉠}, \text{㉡})$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times 0.5\%$ ㉡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 금액*을 합친 금액 $\times 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input type="checkbox"/> 신고기한(3개월)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times 0.5\%$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2022.1.1. 이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이달의

특 집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국세청 —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의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최근 가업승계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input type="radio"/> 중견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규모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22.1.1.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input type="radio"/>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을 주된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 * 「상증령 별표」에 업종 열거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input type="radio"/>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대분류 내에서 변경 허용)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 <'22.2.15.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input type="radio"/> 교육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input type="radio"/>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8511)추가 <'22.2.15.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I.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 1. 가업상속공제 대상

○ 가업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가업상속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 \text{상증법상 주식평가액} \times [1 - (\text{사업무관자산가액} / \text{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상속 개시일 현재)

- ① 법인세법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 제외)

## 2.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 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세법상 '가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 가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 ○ 중소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 중견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기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충족

####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 2) 피상속인 요건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 최대주주 등 : 상증법 시행령 §19②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특수관계자 : 상증법 시행령 §2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



-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2022.2.15. 이후 상속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도 합산합니다.

-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가업요건의 연관성

대표이사 재직요건	가업요건("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의미)
①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업을 사망일까지 영위하여야 함
③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상속인이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는 아님)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허용 → 고령화 사회의 질병 등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 것임

### 3) 상속인 요건

-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

는 별급형을 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정)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3.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 가업용 자산 명세
-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가업상속 후 7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현재 1.2%) / 365

-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2)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기업승계기업의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도록 개정('20.2.11. 이후)

- (예) 식품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제빵업(기타 식품 제조업) 전  
환음료제조업(중분류) 내 알콜음료제조업 → 비알콜음료 제조업 전환  
소매업(중분류) 내 식품품 소매업 → 종합 소매업 전환

### <한국 표준산업분류(예)>

대분류(예)	중분류	소분류
제조업	식품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
	음료제조업	알콜음료제조업/ 비알콜음료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생활용품 도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
-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⑤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의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18 )
-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 사후의무 위반사유별 기준일

- ① ~ ③ :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④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⑤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 기간별 추징율

기간	추징율	기간	추징율
5년 미만	100%	5년 이상 7년 미만	80%

### 3)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15⑧)

#### ① 기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기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기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기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기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기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기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기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 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1)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월과세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 적용사례(가업상속공제적용률 100%인 경우를 가정)



###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정세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 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 18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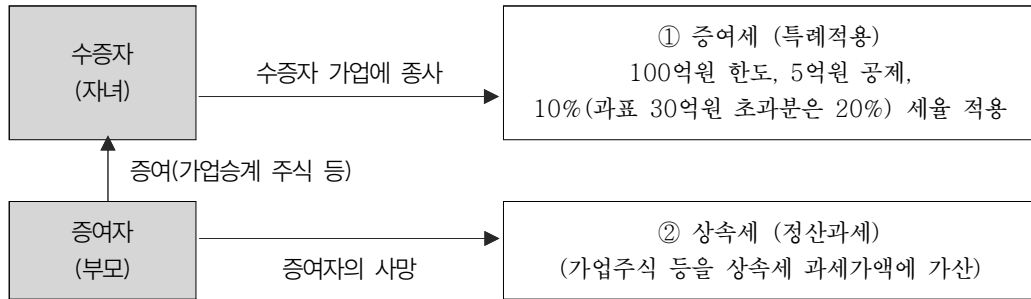
####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기간별 추징율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 II. 기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기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① 과세가액이 3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text{증여세 산출세액} = [(\text{증여세 과세가액} - 35\text{억원} \times 20\%)] + [(35\text{억원} - 5\text{억원}) \times 10\%] \\ \times 100\text{억을 한도로 함}$$

② 과세가액이 35억원 이하인 경우

$$\text{증여세 산출세액} = (\text{증여세 과세가액} - 5\text{억원}) \times 10\%$$

\* 증여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공제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 1. 기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기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③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2) 증여자 요건

-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여야 합니다.

-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음)
- ▶ 중소기업 : 1. 가업상속공제제도 편 참조
-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 3)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아야 합니다.

##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업무무관자산가액}}{\text{총 자산가액}}\right)$$



- ②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④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함(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2020.2.11. 이후 상속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⑥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대로 합산
- ⑦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⑧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3.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1) 증여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 이자상당액} = \frac{\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text{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2^*}{10,000}$
--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① 수증자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②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또는 요건 충족시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3)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Ⅲ.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 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71조)

#### 1. 연부연납제도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 2. 연부연납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 1)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① 신청

상속·증여세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 2)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① 신청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 ① 신청

상속·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 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4.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로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
|------------|--|
| ① 금전       | ② 국채 또는 지방채  |
|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 청 기 한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li><li>•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li></ul>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세</li></ul>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 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li></ul>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2009.1.1.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5. 납세담보의 제공

-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6. 연부연납의 취소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 7.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연부연납 허가 후 첫 번째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3년 또는 5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에서 최장 20년에 해당합니다.

1)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

- 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간 분할 납부(3년간 거치 가능)

\* 총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제외

[illegible][illegible]

- ②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간 분할 납부(5년간 거치 가능)

[illegible][illegible]

## 2)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text{가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text{가업상속공제액}}] \times \frac{1}{(\text{연부여납기간}+1)}$$

\* 매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함

### 연부연납기간

세목			연부연납기간
상속세	기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8.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

### 〈연부연납기간 가산금 계산〉

####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times$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times$  연부연납 가산율

####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  $\times$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times$  연부연납 가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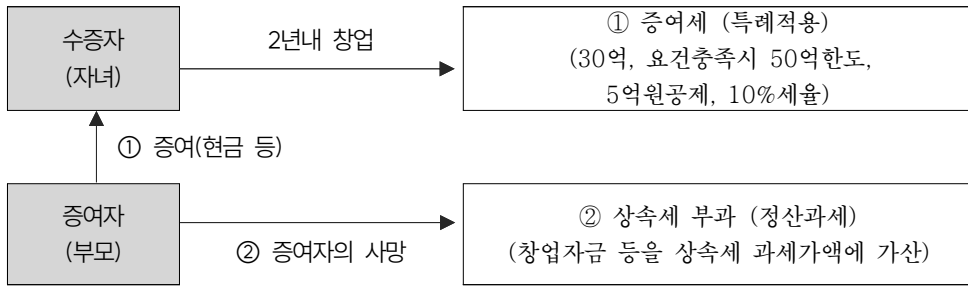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5.3.6.~ '16.3.6.	'16.3.7.~ '17.3.14.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연 2.5%	연 1.8%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 ■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 I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1.1.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text{증여세 산출세액} = (\text{증여세 과세가액} - 5\text{억원}) \times 10\%$   
 \* 30억을 한도로 함(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 한도)

※ 증여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공제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 가능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 2)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 3)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5) 창업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 6③)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1)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 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4.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 까지 매년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begin{aligned} \text{이자상당액} &=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 &\quad \text{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2.2/10,000 \\ &\quad * '22.2.14. \text{ 이전 기간은 } 2.5/10,000 \end{aligned}$$

##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 증진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 [30(50)억원 한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
	기타사항	2년 이내 창업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 10%(20%)

사 후 관 리	가산세 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불분명한금액×0.3%	-
	증여세 추징 (이자 상당액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li> <li>- 4년 이내 모두 해당목적에 미사용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년 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li> <li>- 7년 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li> <li>* 20.2.11. 이후 ① 중분류 내 변경, ② 중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li> <li>- 7년 이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li> </u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li> <li>-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li> <li>-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재차증여재산가산배제</li> <li>-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li> </ul>	

## II.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이액 평가시 할증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 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 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 1)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 2) 최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 3)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 4) 할증평가 제외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④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

- 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 3.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손실보전금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 과제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연간] ①'19년 - '20년 ②'19년 - '21년 ③'20년 - '21년

[상반기] ④'19상 - '20상 ⑤'19상 - '21상 ⑥'20상 - '21상



[하반기] ㉠'19하 - '20하 ㉠'19하 - '21하 ㉠'20하 - '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 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지급 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또는 중소기업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

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다.

컴퓨터(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손실보상 제도개선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붙임 1. 지원대상 판단기준

###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19년 신고매출액 × 12/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0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19년 신고매출액 × 12/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 붙임 2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상반기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19.하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19.12월~ '20.11월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12월~ '21.5월	'21.상반기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6월~ '21.10월	'21.7~11월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11월~ '21.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9 )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붙임 3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정보통신업	영화관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업
교육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예식장업

#### 붙임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3.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4.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5.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인재육성 모범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 ☐ 올해 280개사 내외 선정 예정,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등 혜택 제공
- ☐ 신청방법은 기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중기부 누리집에서 기업을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을 위해 5월 30일(월)부터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 연도별 지정현황(개사) : ('14) 100 → ('15) 150 → ('16) 229 → ('17) 376 → ('18) 250 → ('19) 224 → ('20) 280 → ('21) 280

올해는 모집공고(5.30~6.24) 후 7월부터 8월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9월경에 28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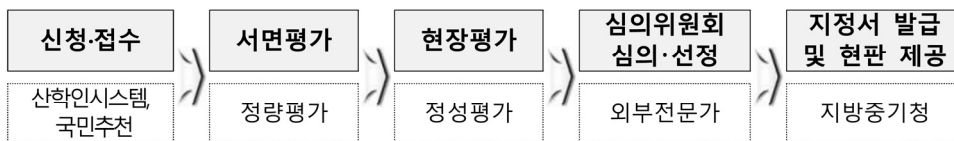


- \*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기업이 6월 24일(금)까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주요정책 - 국민추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에서 해당 기업을 추천  
평가방법은 매출액증가율·총자산이익률 등을 평가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는 경영자의 면담 등으로 기업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기반(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 채용관에 해당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며,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 정책자금 한도 확대(60→100억원),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2점) 부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부 일자리정책과 전상용 사무관(☎ 044-204-7443) 안태유 주무관(74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개요

- (추진배경)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선정
- (선정방법)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과 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을 평가

###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절차 >



- (선정현황) '14~'21년까지 1,889개사 선정, 현재 유효한 중소기업은 784개사(유효기간 3년)  
\* ('14) 100개사 → ('15) 150개사 → ('16) 229개사 → ('17) 376개사 → ('18) 250개사 → ('19) 224개사  
→ ('20) 280개사 → ('21) 280개사

## &lt; 최근 3년간 경쟁률 &gt;

(단위: 개사)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신청	지정	경쟁률	신청	지정	경쟁률	신청	지정	경쟁률
762	224	3.4:1	929	280	3.3 :1	1,089	280	3.9:1

- (인센티브)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 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기업 구인정보 제공,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5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등 40여개 지원사업에 가점(1~1.5점) 부여, 정책자금 한도 확대(60→100억원),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2점) 부여

## 참고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 서면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점)
결격사유		세금 완납 여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법인 및 개인)	세금 체납시 부적격
이 익 창 출 능 력 (17)	성장성	1-1. 매출액증가율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매출액증가율 정도	4
		1-2. 매출총액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매출총액 정도	3
	수익성	1-3. 영업이익률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 정도	3
		1-4. 총자산이익률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총자산이익률 정도	4
	안정성	1-5. 자기자본비율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정도	3

일자리 양·질 (15)	고용증가	2-1. 일자리 양 증가수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활용	5
	성과공유	2-2. 성과공유	실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활용	10
근 무 환 경 (30)	임금수준	3-1. 종사자1인 평균급여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1인 평균급여 정도	10
	고용안정	3-2. 평균 근속연수	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 정도	10
		3-3.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업종·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 정규·비정규직 비율 정도	10
교육 훈련(8)	인재육성	4-1. 교육훈련비용	업종·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1인 월평균 교육훈련비용 정도	8
합 계				70
가점	재직근로자 대상 인력양성사업 참여 실적			2

□ 현장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배점(점)
CEO 인재육성 의지 (5)	- 목표 및 가치 공유 수준 · CEO가 인재육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 · 기업의 비전·목표/전략 등 기업의 전사적 가치공유 활동 정도를 평가	2
	- 우수인재 확보 노력 · 기업의 인재채용 육성 노력 및 미스매치해소 노력의 정도를 파악 ·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	3
일자리 양·질 (10)	- 복지인프라 수준	
	· 근로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 재직자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	
	·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	10
교육훈련 (15)	- 교육훈련 인프라 수준	
	·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 수준을 파악	
	- 기업의 훈련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를 평가	15
합 계		30

### 참고3. 국민추천 방법

- (추천방법)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주요정책-국민추천' 메뉴 접속 →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추천하기 → 추천내용 입력 → 저장
- (추진절차)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참여의사 확인 후 신청안내를 통한 직접 신청 유도

#### < 국민추천제 추진절차 >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 -

### 주요 내용

-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는 바,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100% 편입 허용 이유>

-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됨
-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내 원리금보장 상품 등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 ③ 예·적금 중심 운용(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제도 취지 감안

- 아울러,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 3분기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등 개정 검토

## 1. 추진 배경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DC: Defined Contribution /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급여법상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

- (도입배경)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됨에 따라, 저수익률 상황\* 지속

\* 퇴직연금 수익률 최근 5개년('17~'21) 평균 1.94%

⇒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근로자)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연금 선진국이 既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 미국('06)·영국('12)·호주('13)의 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8%의 높은 수익률 기록중

- (적용절차)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 → 통지후 2주 추가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 디폴트옵션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퇴직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 지난 5월 3일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일 변경예고 하였습니다.

## 2. 주요 내용

### (1) 디폴트옵션 관련(개정안 제12조)

- (현황) 퇴직급여법령상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 한편,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운용방법별 예시 및 최대 편입비중 >

운용방법	예시	최대편입비중
① 원리금보장상품 등	은행 예·적금, RP, 국채, 통안채, 주금공MBS, 채권형·채권혼합형펀드 등	100%
② 그 밖의 운용방법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공모ELS 등	70%

\* 주식, 투자비적격등급 채권, 사모ELS 등은 편입 금지

- (문제점)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개정안)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참여 예정)\*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된다는 점
-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내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다는 점
- ③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취지

(2) 기타사항(개정안 제8·9조) :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

- (현황)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2022년 4월 13일)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 현재 은행 예·적금, 국채, 통안채 등을 퇴직급여법상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인정

-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등

- 따라서,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금번에 추가된 증권금융회사에도 가입자 보호, 규제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안)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6월말)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은행·보험·증권) 협회

\*\* [例]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 편입 가능 자산범위 확대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

## 주요 내용

-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합니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예: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하여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이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 ❶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❷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 ❸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 개 요

- '22.5.26일(목)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 2. 주요 내용

- (기본방향)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가 도입됩니다.
- (주요내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소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 ① (인가)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인가방향 : 시행령 등 개정 사항

- (인가대상)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 (물적요건)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 보유
- (이해상충방지체계) 일부사항(예: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
- (대주주요건) 금투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 지원

⇒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시 구체화

- ② (설정)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③ (운용)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합니다.
-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집니다.
- \* [예] 일부 혁신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 선호
- 한편,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통안채 등에 투자해야함

## 【 투자기구간 운용규제 비교 】

구 분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사모펀드
차 입	불가	가능 (최대 순자산 100% 이내*)	가능 (순자산 400% 이내)
대 출	불가	가능	가능
동일기업투자한도	자산총액의 1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10% 이내	자산총액의 2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	없음
안전자산 투자 의무	없음	자산총액의 10% 이내	없음

\*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④ (회수)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됩니다.

－ 따라서,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⑤ (투자자보호)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 하위법규 사항)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예: 5%) 이상을 일정기간(예: 5년) 보유

－ 또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3. 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와 차이

□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존재하고, 동 기구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구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다만,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각각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예: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또한, 상기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예: 5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 금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①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②운용대상, ③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 ① (조달자금의 원천·규모)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루어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 ② (운용대상)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여 유니콘 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③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4. 기대효과

□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

- ①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②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③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경제의 활력이 높아집니다.
- ④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를 활용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

\* 개인의 비상장기업 직접투자 수요를 전문 운용주체를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 등 적용

#### 5. 향후 계획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년 5월(또는 6월초)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바로 진행하여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참 고. 기존 벤처·혁신기업 투자기구와의 차이

구 분	기업성장펀드	벤처투자조합	사모펀드	공모펀드
운용목적	벤처·혁신기업 투자, 중소기업 scale-up	주로 창업초기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금조달 (투자자 범위)	제한없음 (정부자금×)	주로 정부(모태펀드)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 > 일반사모) 기관투자자 ( > 기관전용사모)	제한없음
펀드설정				
환매 상장	폐쇄형 상장(90일 이내)	폐쇄형 비상장	개방형·폐쇄형 비상장	개방형·폐쇄형 통상 비상장
규모	(예) 300억원 이상 (시행령 규정)	20억원 이상	규모제한 없음	규모제한 없음* * 단, 50억원 미만 소형 펀드는 일부 규제
존속 기간	5~20년	5년 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 단 폐쇄형은 존속기간 설정
운용대상	(예) 성장기업 (벤처·비상장기업 등에 자산의 60% 이상) (시행령 규정)	중소·벤처기업	제한없음 (기관전용의 경우 주로 성숙단계 투자)	펀드종류별로 상이 (증권/부동산/혼합)
운용방법				
차입	(예) 순자산 100% 이내 (시행령 규정)	차입 불가	순자산의 400% 이내	차입 불가* * 단 환매필요시 예외적 허용
대출	대출 가능	대출 불가	대출 가능	대출 불가
투자 한도	- 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20% 이내 - 피투자기업 지분의 50%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 동일기업에 운용사 총자산의 20% 이내 - 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10% 이내 - 피투자기업 지분의 10% 이내
회수방법	거래소 시장매매	만기상환/양도	환매 / 지분양도	환매
운용주체	(예)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창투사, 신기사) 증권사 (시행령 규정)	벤처캐피탈 (창투사, 신기사)	자산운용사 / GP	자산운용사
진입규제	집합투자업 인가	등록	일반사모·GP 등록	집합투자업 인가
투자자 보호장치	(예) 의무출자 비율(시행령) : 5%, 5년 이상	출자금의 1%(GP) (공모벤처조합: 5%)	없음	2억원, 3년 이상 (행정지도)
	안전자산 보유의무 : 10% 이상	없음	없음	없음
	(예)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	없음	없음	부실자산 공시* * 피투자기업 부도 등

\* 靑書 : 기업성장펀드와 他투자기구간 유사한 특징, 赤書 : 기업성장펀드만의 고유한 특징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 금융감독원 -

## 주요 내용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 1. 개정 배경

-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주요 과제로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19.11.1일 시행)되었습니다(현재까지 40개 회계법인, 별첨 참조).
-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정부는 상장사 감사인 진입(등록)요건\*을 통합 감사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위주로 설정하였습니다.
- \* ①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④ 감사보고서 심리체계 구축, ⑤ 성과평가 시 품질평가지표 활용 등

- 그러나, 그동안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해 온 결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도 있었습니다.
    - ※ 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2022.1.24.일 보도자료)
    - 2021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2022.4.28.일 보도자료)
- 이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감리결과 외부공개제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한편,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2. 주요 내용

### 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다양화 (시행령 § 16②, 규정 § 14⑨)
- (현행)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등록취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
  - 이에,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등록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 \*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과 지정대상 회사를 각각 감사인 지정점수(소속 회계사수 등을 기반으로 산정)와 자산총액 순서로 배열하여 매칭하는 방식
  -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받은 회계법인은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원칙적으로 30점당 1개 기업) 만큼 지정에서 제외
  - 감사인 감리 중 등록요건 위반 발견 시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될 것입니다.

※ (사례) '17년 A회계법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4,070점 부과

- 해당 감사인은 증선위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 ②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 착수 근거 마련 (시행령 § 29, 규정 § 23⑦)

- ☐ (현행)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 (개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 ③ 등록취소 시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마련 (규정 § 8의2)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중인 상장회사에게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

### ①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 (규정 별표4)

- ☐ (현행) 지정감사(2~3년) 수감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 감사인이 교체되어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 ☐ (개선)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됩니다.



②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취소 절차 간소화 (규정 § 14⑧)

- ☐ (현행)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공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된 후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하여 기업이 분쟁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 (개선)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 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 (현행) 신고 → 자율조정 → 한공회 윤리위 징계 → 지정취소·지정제외점수 부과
  - (개선) 신고 → 자율조정 → 지정취소 → 협의제조사 →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 다만, 기업이 지정받은 감사인 교체를 위해 동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③ SPAC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규정 § 12②)

- ☐ (현행) 기업이 감사인 지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무기준\* 적용 시 SPAC합병법인은 과거 재무기준을 합병 전 SPAC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3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또는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 SPAC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로 영업활동이 없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합병 후 존속법인을 SPAC으로 할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습니다.
- ☐ (개선) SPAC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 기타 외부감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정 § 23)
  -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투명성보고서 공시(인터넷 홈페이지) 대상을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공시해야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시행령 § 28①, 규정 § 22②)
  -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 \*\* 최근 3개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추가
- ☐ 그 외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정비, 회계법인 수시보고서 항목 정비 등 그동안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3. 향후 감독방향

- 정부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 \* 품질관리기준의 핵심사항이 등록요건과 유사한 만큼 추가적인 감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1) 등을 참고하시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 < 관련 용어 설명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기반으로 산정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 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 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

□ 오늘(5.29.)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전체 법률 목록 및 소관 부서는 [붙임1] 참고

○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2023년 7월 1일)

☞ 산재보상정책과 소관(044-202-8831)

-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다.
-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
-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 또한,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하여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 \* (전속성 없는 종사자: 40만명) 하나의 주된 사업이 없이 불특정 다수 사업에 노무제공 (보조사업장 종사자: 23만명)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나, 보조 사업에도 노무제공
-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개정법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

☞ 공무원노사관계과 소관(044-202-7656, 7981)

- 그간 공무원·교원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10.7.1.)를 적용하지 않아 왔으나,
  - \*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여야 합의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 \* 노동조합법은 '근로시간' 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공무원 및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근로시간" 대신 "근무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
-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교원은 임용권자) 동의를 받아,
  -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 등과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시·도지사·시군구청장·교육감
- 근무시간 면제한도(면제시간, 사용인원)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각각 두고,

-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한다.
  - \* (공무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행정부, 각 시도, 시군구, 교육청
  - (교원) 초·중·고교원은 각 시도, 대학은 각 대학교
- 또한, 국민들이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시간,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 \* 구체적인 공개 내용,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 노사관계법제과 소관(044-202-739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이번 개정은 그간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요건이 없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20.10.16.)를 반영한 것이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 여성고용정책과 소관(044-202-7477)

- 보다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 그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

##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044-202-7529)

-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격대여 외에도 자격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뢰 등(형법 제127조, 제129~132조)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하였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외국인력담당관 소관(044-202-7156)

-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안전·보건조치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현행 고용허가 제한 사유)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

□ 그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추가 의결되었다.

- \* (근로복지기본법)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 추진 시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독촉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 등  
(고령자고용법) 고령자인재은행 등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  
(국가기술자격법)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교육원의 노동인권 관련 교육 대상에 '청년' 추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법)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험재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화

## 붙임 1. 5.29. 국회 본회의 통과 13개 법률 목록

연번	법률명	소관 부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정책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3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사관계과
4	교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법제과
6	고용보험법	여성고용정책과
7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정책과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력담당관
9	근로복지기본법	디지털노동대응TF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11	국가기술자격법	직업능력평가과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노사협력정책과
1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 붙임 2. 특고·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법안 주요 내용

### 1. 적용 대상

- ☐ (적용범위)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
- \* ①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와 ②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
  - 적용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직종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
    - \* 업무상 재해 위험, 노무제공 형태 등
- ☐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現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되, 보험료징수법에 "휴업등 신고

제도" 도입하여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미부과 근거 마련

\* (現) '21.7.1부터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제외  
→ (改) 실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방식 도입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캐디 등)은 "휴  
업등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미발생 기간 동안 보험료 미부과

## 2. 보험료 부과·징수

- ☐ (산정)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 × 보험료율
  -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 직종 단위에서 요율을 조정하고 재해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미적용
- ☐ (부담) 종사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면제 또는 경  
감) 근거 마련
- ☐ (징수) 사업주가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그 다음달에 보험료 부과
  - \* 사업주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3.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 ☐ (플랫폼 운영자 의무) 플랫폼 노무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자료제공 협조의무 등 부여
- ❶ (신고)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하도록 함
  - \*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❷ (공제·납부) 플랫폼 종사자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  
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
- ❸ (자료제공 협조)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
- ❹ (전용계좌 개설)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료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운영토록 함



- (플랫폼 운영자 지원)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4. 급여 및 보상제도

- (급여산정)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평균보수" 개념 신설
  - 노무제공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실 보수 기준으로 산정
  -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 이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
- (업무상 재해) 원칙적으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노무 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하위법령 위임
- (휴업급여)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휴업급여 최저기준 별도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법 시행 전 보조사업장 재해 보호)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부칙에 명시



#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생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2일(월)	5월 3일(화)	5월 4일(수)	5월 6일(금)	5월 9일(월)
미 달 러 (USD)	1265.40	1265.80	1265.70	1261.80	1272.70
위 안 화 (CNH)	189.91	189.55	189.51	189.72	189.74
일 본 엔 (JPY)	973.35	972.23	972.75	968.94	973.87
유 로 화 (EUR)	1334.74	1330.10	1331.90	1330.13	1340.92
영 국 파 운 드 (GBP)	1592.06	1581.55	1581.75	1560.40	1569.94
캐 나 다 달 러 (CAD)	985.02	982.95	985.94	983.44	985.29
홍 콩 달 러 (HKD)	161.26	161.29	161.28	160.75	162.13

통 화 명	5월 10일(화)	5월 11일(수)	5월 12일(목)	5월 13일(금)	5월 16일(월)
미 달 러 (USD)	1274.60	1275.50	1277.00	1286.40	1286.00
위 안 화 (CNH)	188.87	189.34	189.27	189.87	188.43
일 본 엔 (JPY)	977.57	978.48	982.95	1000.58	993.86
유 로 화 (EUR)	1345.85	1343.55	1343.02	1335.35	1337.70
영 국 파 운 드 (GBP)	1571.71	1570.91	1563.75	1569.73	1575.22
캐 나 다 달 러 (CAD)	979.78	979.12	982.95	986.73	995.55
홍 콩 달 러 (HKD)	162.38	162.49	162.68	163.87	163.82

통 화 명	5월 17일(화)	5월 18일(수)	5월 19일(목)	5월 20일(금)	5월 23일(월)
미 달 러 (USD)	1281.60	1277.20	1269.30	1274.60	1269.50
위 안 화 (CNH)	188.53	188.28	187.94	188.13	188.93
일 본 엔 (JPY)	993.30	986.67	988.98	997.61	992.69
유 로 화 (EUR)	1337.48	1347.25	1329.21	1348.59	1342.75
영 국 파 운 드 (GBP)	1579.64	1594.97	1567.20	1589.17	1587.89
캐 나 다 달 러 (CAD)	997.39	997.19	985.56	994.46	990.37
홍 콩 달 러 (HKD)	163.26	162.71	161.72	162.42	161.75

통 화 명	5월 24일(화)	5월 25일(수)	5월 26일(목)	5월 27일(금)	5월 30일(월)	5월 31일(화)
미 달 러 (USD)	1267.70	1264.30	1263.30	1266.40	1256.90	1245.80
위 안 화 (CNH)	189.66	189.48	189.29	187.88	185.74	186.40
일 본 엔 (JPY)	991.79	996.57	992.97	996.50	988.01	975.61
유 로 화 (EUR)	1354.28	1357.23	1350.85	1359.35	1348.53	1342.29
영 국 파 운 드 (GBP)	1594.20	1586.19	1590.75	1597.12	1587.21	1575.69
캐 나 다 달 러 (CAD)	991.36	986.35	985.84	991.39	987.66	984.28
홍 콩 달 러 (HKD)	161.51	161.07	160.94	161.34	160.13	158.73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생매출의 회계반영, 결산 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